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주최/주관 : 김교흥, 윤관석 국회의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2023년 3월 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관

김교흥, 윤관석 국회의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공동주최

- 인천지역 국회의원
맹성규, 박찬대, 배준영, 신동근, 유동수, 윤상현, 이성만, 이재명, 정일영, 허종식, 홍영표
국회 행정안전위원
- 김용판, 김철민, 문진석, 박성민, 송재호, 오영환, 용혜인, 이만희, 이성만, 이채익,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정우택, 천준호, 최기상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후원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주최/주관 : 김교흥, 윤관석 국회의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2023년 3월 8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목 차

인사말.

국회의원 김교흥.....02

국회의원 윤관석.....04

국회의원 이재명.....06

국회의원 정우택.....08

국회의원 이만희.....10

국회의원 홍영표.....12

국회의원 윤상현.....14

국회의원 김철민.....16

국회의원 신동근.....18

국회의원 유동수.....20

국회의원 박찬대.....22

국회의원 정일영.....24

국회의원 김용판.....26

국회의원 박성민.....28

국회의원 송재호.....30

국회의원 이형석.....32

국회의원 이성만.....34

국회의원 허종식.....36

국회의원 임호선.....38

국회의원 이해식.....40

국회의원 배준영.....42

국회의원 오영환.....44

국회의원 용혜인.....46

환영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고문 원학운.....50

축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54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환.....56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한창섭.....58

인천광역시장 유정복60

발제 및 토론.

좌장 김창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발제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64

이영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장78

박인규 (사)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82

이재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88

김민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9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주최 의원 인사말



김교홍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있는 인천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홍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분들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토론회를 함께해주신 윤관석 의원님과 오경중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님, 행정안전위원,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7년 전 그날, 인천에서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5월이 있습니다.

1986년 5월 3일, 군부독재에 항거한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인천 시민회관 사거리는 금방 시민들로 가득 찼고 주안역, 주안사거리, 석바위까지 발디딜 틈 없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학생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수도권 전역에서 몰려왔습니다. 인천대 총학생회를 이끌고 거리로 나섰던 저도 그날의 뜨거움을 기억합니다.

5·3항쟁은 직선제 개헌과 민중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이었습니다. 전국 민주화운동단체, 학생운동, 노동운동 단체, 인천시민 5만 명은 ‘군부독재 퇴진’, ‘직선제개헌’, ‘민중생존권’을 요구하며 경찰의 폭력 진압에 맞서 인천 곳곳에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5.3항쟁으로 319명이 연행되고, 129명이 구속됐으며, 60명이 수배됐습니다. 5.3항쟁을 계기로 국민의 분노가 전 국민적인 항쟁으로 이어졌으며 군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해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족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인천5·3항쟁은 민주화운동사에서 여전히 잊혀진 항쟁으로 남아있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역사와 발자취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온전히 계승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자, 국가와 그 수혜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80년 광주민주항쟁 이후 가장 뜨거웠고 이듬해 6월항쟁이라는 거대한 불꽃을 일으킨 5.3인천민주항쟁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화사업회법에 인천 5.3항쟁을 명시화하는 법안 개정을 윤관석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인천지역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 심사를 담당할 행정안전위원회 동료 위원님들도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셔서 더욱 뜻깊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올바른 위상정립과 이를 기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는 지혜로운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서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교홍



윤관석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환영합니다.

인천 남동구를 출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입니다.

인천 지역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뜻을 모아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이라는 주제로 민주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천5·3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이번 21대 국회에서 개원과 함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해주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자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이신 김교홍 국회의원님과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우재 이사장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오경중 센터장님,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5·3민주항쟁’은 6월항쟁의 도화선이자 시발점이었습니다.

수도권의 수많은 대학생들과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등 여러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인천시민회관에 집결했습니다.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시지부 결성대회’가 열리는 1986년 5월 3일 정오부터 오후 10시 까지 5만 명이 모였고, 1만 명이 진압경찰에 맞섰습니다.

당시 백골단의 폭력 진압, 사방에서 터진 최루탄에도 민주주의를 향한 연대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천5·3민주항쟁 후 전두환 군부는 대대적으로 구속, 수배, 고문 등 민주화운동 단체를 송두리째 뿌리 뽑으려 들었고, 무리한 탄압은 부천서 성고문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으로 이어져 1987년 6월 항쟁의 불길을 타오르게 했습니다.

결국 1980년 광주항쟁 발생 7년 만에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반환된 1987년 6·29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치와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추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님, 발표로 수고해주시는 이우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회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과 함께 ‘인천5.3민주항쟁’의 정신과 가치를 가슴에 한 번 더 깊이 있게 새기를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뜻을 모아주신 여러분과 인천시민,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계자분들과 함께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관석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이재명입니다.

먼저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 5.3 민주항쟁 토론회'의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김교홍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님과 발제를 준비해주신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님, 그리고 토론을 위해 함께 준비해주신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를 비롯한 모든 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천 5.3 민주항쟁은 광주의 피로 얼룩진 전두환 정권에 대한 민주항쟁의 기폭제 역할로 이듬해 6월 항쟁의 서막을 연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항쟁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는 기록되었습니다. 이 기록은 1986년 5.3 민주항쟁 당시 인천에 모인 각지의 운동연합 및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결집하여 신군부 정권의 억압으로 표출하지 못하던 기존 헌법의 폐지와 민주헌법으로 제·개정을 촉구하고 각계각층에서 그동안 독재정권 하에서 표출하지 못했던 다양한 요구들을 주장하여 87년 6월 항쟁의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5.3 민주항쟁의 주무대였던 인천시민회관은 1999년 철거돼 현재 주안 쉼터공원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 기념비가 무색하지 않게 인천 5.3 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함께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윤관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인천 5.3 민주항쟁이 2·28 대구민주화운동, 4·19 혁명, 부·마 항쟁, 6·10 항쟁과 대등한 반열에서 마땅히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인천 5.3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가슴깊이 되새기고,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고견이 입법과 정책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명



정우택 / 국회부의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부의장 정우택 의원입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 5.3 민주항쟁」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여야 동료 의원님들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좌장을 맡아주신 인하대학교 김창수 교수님과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시다시피 금일 토론회의 주제는 1987년 6월 항쟁의 그 영광스러운 불씨가 되었던 사건인 1986년 일어난 ‘인천 5.3 민주항쟁’입니다. 인천 5.3 민주항쟁은 신군부의 집권에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비롯한 국민들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저항운동이었습니다. 지도부 없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가진 단체들이 모여 각기 원하는 구호를 외치는 와중에도, 독재에 반대하는 ‘직선제 개헌’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는 선명했을 것입니다.

‘인천 5.3 민주항쟁’으로부터 37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많은 나라 가운데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하는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토대가 되었던 6월 항쟁의 의미를 고려해볼 때, 그 밑알이 된 ‘인천 5.3 민주항쟁’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숙의의 장으로 모여주신 여러분께서 86년 5월 그때의 마음으로 목소리를 내어주시어, 숭고한 희생과 의미를 더욱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를 계기로 상임위에서 더욱 활발히 논의하여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천 5.3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우택



이만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경북 영천 · 청도 국회의원이만희입니다.

인천 5·3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김교홍 의원님과 공동주최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이 6.25전쟁 당시 절체절명의 공산화 위기에서 기사회생하여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까지 그 시작은 인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인천은 지리적 이점을 중심으로 항공 · 항만 · 산업단지 등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기여했고,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에도 지난해 6개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닌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980년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전국적인 저항과 항쟁이 이어진 가운데 공업도시 인천에서도 많은 노동운동과 투쟁으로 민주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천 5.3민주항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이해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적 고찰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5.3민주항쟁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pq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23. 03. 08.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만희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를 국회의원 홍영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분들과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토론회를 주관해주신 김교홍 의원님, 윤관석 의원님과 토론회 주최에 함께해주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86년 인천 5.3 운동부터 1987년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당시 항쟁을 관통하던 하나의 지향점은 ‘개헌과 민주화’였습니다. 1985년 총선에서 독재정권 속에서도 돌풍을 일으킨 야당은 ‘개헌을 위한 1,000만 명 서명운동’에 돌입하면서 전국 주요 도시에서 개헌추진위원회 결성대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했습니다.

1986년 3월 11일 서울에서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주요 도시를 거쳐 5월 3일 인천시민회관 앞 광장(현 시민공원역 일대)까지 이어졌습니다. 집회 당일에 공안 당국의 철저한 탄압으로 유혈사태가 발생했으나, 인천 5.3 운동에서 지켜진 민주화의 횃불이 87년 6월 항쟁으로 그리고 개헌으로 이어졌다는 데에 이견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천 5.3 운동은 37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시사점이 큼니다.

37년 전 전두환 정권처럼 총칼만 쓰지 않을 뿐, 윤석열 정부는 정치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보도한 언론을 전용기에서 쫓아냈고, 159명의 꽃다운 청년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도 진정한 사과 한마디는커녕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인천 5.3 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항상 되새겼다면 오늘날과 같이 참담한 일들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첫걸음이 다양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기반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상 민주화운동에 인천 5.3운동을 포함해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인천 5.3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고견들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영표



윤상현 /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인천 미추홀구(을) 국회의원 윤상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1980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었던 인천 5·3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개정 토론회를 갖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저를 비롯한 인천지역 열 분의 국회의원분들과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김창수 교수님, 발표를 맡아주신 이우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토론회 여러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4·19 혁명이 있기까지 지역에서 2·28 대구 항쟁과 3·8 대전 항쟁이 있었듯이, 인천 5·3 민주항쟁은 1980년 5월 이후 최대규모의 시위였음에도 정작 민주화운동 역사에 있어서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인천 민주화 운동의 가치와 정신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분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저 윤상현도 인천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가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인천의 숭고한 정신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마음속 깊이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상현



김철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 국회의원 김철민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인천 5.3 민주항쟁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천 5.3 민주항쟁은 1980년 5월 광주 민주항쟁 이후 최대의 시민항쟁이었습니다. 학생뿐만이 아니라 노동자, 인천시민 모두가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습니다. 인천 5.3민주항쟁의 정신은 빠르게 퍼져나가 인천 이외에 다른 도시로 직선제 개헌대회가 확산되었고,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인천 5.3 민주항쟁은 군부독재를 무너트리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룬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습니다.

인천 5.3 민주항쟁이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사에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인천 5.3 민주항쟁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와 학계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5.3 인천 사태 등으로 불리는 등 5.3 민주항쟁의 의의와 정신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인천 5.3 민주항쟁을 우리 역사 속에 합당한 제 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화 운동 역사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계승이 필요합니다. 민주화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인천 5.3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 정신과 의미를 제대로 기념하고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인천 5.3 민주항쟁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바탕으로 그 의미와 정신을 공유하고, 인천 5.3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철민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를 국회의원 신동근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천 5.3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토론회를 함께 공동주최 하게 되어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개최를 위해 소중한 뜻을 함께 모아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인천 5.3민주항쟁 3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3 항쟁은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극심한 탄압 하에 전두환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를 원하는 민심이 크게 드러난 대규모 민주화운동 시위였습니다. 당시 구 시민회관 사거리에는 노동자, 학생, 재야를 가리지 않고 빠짐없이 한 자리에 모여 '독재 타도, 직선제 쟁취' 구호를 외쳤습니다. 결국 5.3 인천 민주항쟁이 밑거름이 되어 이듬해 6월 민주항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대한 민주화운동의 족적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6월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면 그 발단이 된 5.3 인천 민주항쟁의 중대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전후 맥락을 보더라도 반드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2020년 6월, 윤관석 의원께서 인천 5.3 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희미해져가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법이 조속히 개정돼 관련 기록물들을 보전하고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도 건립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나침반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지역의 주요한 민주화운동으로 올바른 의미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인천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천 5.3민주항쟁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동근



유동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국회의원 유동수입니다.

우선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토론회에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인천시당위원장 김교홍 의원님과 윤관석 의원님,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감사드립니다.

이어 좌장을 맡아주신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님과 발표를 맡아주신 이우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서술된 내용입니다.

헌법에 나와있듯, 우리 국민에게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은 최우선의 가치이자 당연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전만 해도 민주주의란 투쟁 끝에 얻어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4.19 혁명·광주민주화운동·6.10 항쟁 등 역사 속에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위해 숭고한 투쟁을 이어나갔습니다.

인천 5.3민주항쟁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독재정권을 흔든 최대 규모의 시위이자,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인천5.3민주항쟁은 잊혀지고 있습니다.

인천5.3민주항쟁의 무대인 시민회관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 시민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곳에는 돌로 만든 기념비와 표석만이 이곳이 민주항쟁 터였음을 조용히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제외되어 있어 인천5.3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재정적·물질적 지원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민주화운동 등 파란만장한 대한민국 역사의 주역은 언제나 국민이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 인천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섬광처럼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30여 년 전 인천 시민들의 처절한 노력과 항쟁의 흔적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많은 분들과 함께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개정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인천의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향유하는 국민으로서 법 개정에 앞장서 인천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동수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 5.3민주항쟁」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 5.3민주항쟁」토론회를 열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입니다. 더불어,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위해 힘 써주신 김교홍 인천시당위원장님과 윤관석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주신 인하대 김창수 교수님과 발제를 맡아주신 (사)인천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 이우재 이사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토론자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군부독재타도! 민주정부수립!”1986년 5월 3일 인천 시민회관 앞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외침입니다.

시민과 대학생, 그리고 노동·사회·종교계가 집결한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독재정권을 흔든 최대 규모의 시위이자,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민주화운동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시사점에 비해 역사 속에서는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는 인천5.3민주항쟁을 1986년 5월 3일에 열린 투쟁으로만 보는 것을 넘어, 당시 인천 지역의 노동운동, 민족민주운동, 시민사회 운동 등 다양한 참여 과정과 의미를 폭넓게 조망해 역사 속에서 5.3 민주항쟁의 가치를 찾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오고 가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고견이 인천 5.3민주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드높이고, 그 결과 인천 5.3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키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 5.3민주항쟁」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저 또한 인천의 국회의원으로서 인천 민주5.3항쟁이 역사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찬대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와 동춘·옥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교흥, 윤관석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한 86년 인천 5·3민주항쟁의 의미가 더욱 남다른 이유는 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자 87년 전두환 정권에 맞서 일어난 6월 민주 항쟁의 시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안·제물포·동인천역 일대 5만여 명 인파가 모여 외쳤던 군부독재 퇴진과 민주헌법 쟁취, 노동 3권 보장은 우리 민주주의의 뿌리이자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를 염원했던 민주열사들과 호국영령의 지엄한 뜻을 잇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천은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빈민운동의 성지이며, 노동운동의 선구지였고 86년 인천 5·3민주항쟁은 대한민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큰 공을 세운 역사적 항쟁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인천 5·3민주항쟁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역사적 순간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검찰 공화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보복과 제1야당 대표 구속에만 혈안인 체 민생과 경제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엄한 국민의 의지를 받들어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저도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일영



김용판 /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국회의원 김용판입니다.

인천 5.3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야를 떠나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번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오경중 인천 민주화운동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행사를 위해 바쁘신 와중에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이끌어주실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이영제 한국 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님, 박인규(사)시민과대안 연구소 소장님, 이재성 성공회대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님, 김민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설립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부·마항쟁, 6·10항쟁 등 민주화운동 또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국민들과 함께 기념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 의의를 국민들께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천 5.3민주항쟁은 그 역사적 중요성과 달리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인천 5.3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관련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고 나아가 인천 5.3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규정된 민주화 운동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3. 03. 08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용판



박성민 /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울산 중구 국회의원 박성민입니다.

오늘,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인천5.3항쟁’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에 함께해주신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좌장을 맡아주신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님, 발표를 맡아주신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우재 이사장님과 그 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5.3항쟁은 1986년 직선제 개헌에 대한 열망으로 벌어진 민주화 운동으로, 제도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가져온 6월 항쟁의 불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소수의 과격한 행동으로 폄하되는 등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시위에 참여한 많은분들이 연행되어 고초를 겪으면서 민주화운동을 하였음에도 인천5.3항쟁은 법률상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기념 및 계승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인천5.3항쟁에 대해 올바르게 평가하고 그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또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인천5.3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등 법 개정을 진행하여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일정에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성민



송재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갑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인천 5·3민주항쟁 기념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주최해주신 김교홍·윤관석 의원님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오경중 센터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방 이후, 이 땅에는 엄동설한이 이어져 왔습니다. 독재정권과 군부세력은 시민들을 압제하며 정권을 유지했습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항상 민주주의를 탄압하며 괴롭히는 것이 상식이 되어버린 비상식적인 시대였습니다.

인천은 그 안타까운 시대를 절대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뜻 있는 사람들은 인천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노동자로 취업한 대학생과 민주화운동을 이끈 열사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키우며 심각한 당시의 노동환경과 독재정권을 바꾸고자 처절히 싸웠습니다. 그렇게 인천은 노동운동과 민주화의 메카로 발돋움하며 분주했습니다.

인천 5·3민주항쟁은 독재정권의 끝을 알리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새날을 알리는 두부 장수처럼, 묵묵히 그리고 기어코 그 추운 새벽길을 열었습니다. 인천의 5월은 대한민국의 6월로 이어지며, 이 땅에 성숙한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했습니다. 그렇기에 인천의 노고와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개최하는 토론회가 그 기억의 시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교홍 의원님께서 인천 5·3민주항쟁에 대한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5·3의 가치와 민주열사들의 희생, 노력이 잊히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로운 평가 뒤에 국가적으로 인정받는 민주화운동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 남길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추운 날이 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우리 민주화 역사에도 따뜻한 봄이 함께 오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재호



이형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이형석입니다.

5·3 민주항쟁의 현대사적 가치를 되돌아보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토론회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번 토론회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를 제안해주신 김교흥, 윤관석 의원님과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도 감사드립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님, 발표를 맡아주신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우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인천에서 일어난 5·3 항쟁은 민주화의 물결이 전국으로 확산된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습니다.

특히 5·3 항쟁은 대학생, 노동계, 종교 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결집하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6월항쟁과 닮았습니다. 범국민적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많은 과거사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우리 현대사의 발전과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했지만, 모두가 저마다의 가치를 오롯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행정안전위원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나아가 5·3 민주항쟁을 비롯한 인천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가 오롯이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형석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만입니다.

‘인천5.3민주항쟁’의 정신 계승 및 가치 재조명을 위한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를 주관·주최하신 의원님들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986년 5월 3일 인천시민회관에서 벌어진 인천5.3민주항쟁은 수도권의 수많은 대학생과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해 뚝뚝 뭉치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정점인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천 시민의 민주 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사에 매우 중요한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중요성과 달리 4.19 혁명, 부·마 항쟁 등 기존에 알려진 다른 민주화 운동에 비해 조명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민주화기념사업회법 개정을 통해 인천5.3민주항쟁의 의미를 다시 세우고 국민께 널리 알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불씨가 되었던 인천 민주주의 역사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한 노력과 민주화를 위한 인천시민 정신의 계승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가 인천5.3민주항쟁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그 가치가 재평가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인천 민주주의 역사를 기리고 그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중한 인사말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성만



허종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 허종식입니다.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토론회’개최를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 감사드리며, 좌장을 맡아주신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님, 발표를 맡아주신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우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천5.3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화의 씨앗입니다. ‘독재타도, 직전세 쟁취’라는 목표하에 치열하게 투쟁했고, 마침내 민주주의란 꽃을 피워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미추홀구는 인천5.3민주항쟁의 발원지이며 현재도 ‘시민공원’이란 이름과 그곳에 세워진 기념비로 그 정신이 주민들과 함께 숨쉬고 있는 지역입니다.

인천에서는 인천5.3민주화항쟁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위원회가 출범했고 인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1986년 5월 3일의 인천을 기억하기 위한 인천 시민들의 의지입니다.

이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통과라는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곧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인천과 미추홀구의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인천시민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해 열심히 힘쓰겠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고 인천5.3민주항쟁이 법적지위를 인정받는 날을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그날이 온다면 오늘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분들과 “다시 부르마, 민주주의여!”를 외치며 서로 애썼다며 축하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천5.3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허종식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증평 · 진천 · 음성 국회의원 임호선입니다. 인천 5.3민주항쟁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6월 항쟁과 대통령직선제 개헌으로 대표되는 87년 체제에 끼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 5.3민주항쟁〉가 개최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무사히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김교홍, 윤관석 의원님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오경중 센터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5.3민주항쟁의 올바른 평가를 해주시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인하대학교 김창수 교수님과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우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 5.3민주항쟁은 6월 항쟁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직선제 개헌이라는 대의를 위해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인천시민회관 앞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민들을 강경하게 진압했고 모진 구타와 고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자리잡기까지 수많은 순국선열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의 통곡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987년 6월, 서울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원히 끝날 줄 몰랐던 군부독재라는 망령이 국민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5.3 항쟁의 희생자들이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인천 5.3민주항쟁을 민주화기념사업회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민주화기념사업법회를 심의 · 검토하는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속 의원으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인천 5.3민주항쟁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5.3민주항쟁의 정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길 바라며, 흔들리지 않는 민주주의를 위해 언제나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호선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동(을) 국회의원 이해식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인천5.3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된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좌장을 맡아주신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님, 발표를 맡아주신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천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벌어진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1987년 6월 항쟁의 서막을 연 의미있는 항쟁입니다.

이는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산발적으로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역량을 집중시킨 민주주의 역사의 대회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과 대등한 반열로 평가 받고 있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천5.3민주항쟁’의 위상 정립은 물론, 「민주화기념사업회법」 개정 필요성 논의를 위한 오늘 토론회는 그 의미가 매우 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로운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저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고민하고 법률안 개정까지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해식



배준영 /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인천 5·3항쟁을 주제로 한 오늘 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행사 주관에 위해 애써주신 김 교홍·윤관석 의원님과 오경중 인천민주화운동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5·3항쟁은 명확한 재조명과 평가가 유보된 채 오랜 세월 동안 터부시되며 시민과 역사가들에게 잊혀져왔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하지요, 과거가 보여주는 사실과 현재의 우리가 부여하는 해석이 만나 역사는 끊임없이 재창조되기에, 우리는 이미 마침표가 찍힌 역사의 한 페이지라 할지라도 언제든 다시 들춰보고 해석하는 일을 멈춰선 안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통상적인 의미의 행사가 아니라, 5·3항쟁과의 '역사적 대화'를 37년만에 재개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부디 오늘 대화에 참여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의 깊이 있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5·3항쟁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고, 더 나은 민주주의가 꽃피우는 초석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 역시 인천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5·3 항쟁의 의의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앞으로도 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행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준영



오영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의’국회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5.3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일에 함께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인천5.3민주항쟁은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합니다. 1980년대 이후 최대 규모의 민주화운동이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킨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에 맞서고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었던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평가에 걸맞은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과 제대로 된 예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제20대, 21대 국회에서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상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어왔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를 맡아주신 이우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님, 좌장을 맡아주신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님, 토론을 맡아주신 이영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소장님, 박인규 시민과대안 연구소장님, 이재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인천5.3민주항쟁의 올바른 의미부여를 위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모아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오늘 공동주최 해주신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천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역사인 인천5.3민주항쟁을 기억하고, 5.3정신을 깊이 새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영환



용혜인 /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인천 5.3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인천민주화운동센터에 감사드리며, 좌장을 맡아주신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님, 발제를 맡아주신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우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986년 5월 3일 인천 주안 구 시민회관 일대에서 일어난 인천 5.3 민주항쟁은 5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큰 항쟁입니다. 이 항쟁으로 민주화운동에 선을 긋던 신민당의 개헌추진 결성대회는 무산되었고 이후 신민당은 다시 민주화운동진영과의 연대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은 6월 항쟁을 이끌었던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결성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항쟁에서는 ‘생활임금’, ‘노동해방’ 등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제시되었으며 항쟁에서의 다양한 요구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비록 전두환 정권은 항쟁에 참가한 시민 129명을 소요죄를 적용하여 구속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고문을 서슴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저항의 횃불을 이어가 결국 6월 항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처럼 1986년 5월의 인천 5.3 민주항쟁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고 방향타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인천 5.3 민주항쟁은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 항쟁은 ‘사태’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불리기도 하고 시민들의 기억에서 잊혀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토론회가 인천 5.3 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5.3 민주항쟁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이뤄져 5.3 민주항쟁을 기억하는 기념사업이 펼쳐질 수 있기를 그리고 시민들의 기억에서 86년 5월의 인천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도화선으로 기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 역시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인천 5.3 민주항쟁에 올바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인천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역시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 03. 08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환영사



원학운 /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되기를 바라며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로, 전두환 군사독재에게 빼앗긴 이 나라의 주권을 되찾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되찾으려고 일어난 운동입니다.

광주항쟁 발발 6년이 지난 당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등 국민들의 기본권은 철저히 유린되었고 참정권조차 무시되어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았던 시기였습니다.

학생을 비롯하여 깨어있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민주정부 수립을 외치며 민주헌법의 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군사독재 정권은 수 백명을 연행하여 129명을 구속하였고,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 조직을 말살하려 많은 활동가들을 지명 수배하였습니다. 또한 5.3민주항쟁의 수배자들을 찾는 과정에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인천5.3민주항쟁이 발발한지 어느덧 3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2002년부터 인천 5.3민주항쟁의 의미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기념식 및 토론회, 전시회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30주년을 맞이하여 옛 시민회관 터에 기념비를 세웠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김교홍 의원님과 발제를 맡으신 이우재이사장님, 좌장의 김창수 교수님, 토론으로 이영제 부소장, 박인규 소장, 이재성 연구위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인천시민들과 활동가 동지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의 성과가 이어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고문 원학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하신 윤관석 의원님과 김교홍 의원님, 그리고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1986년,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을 가슴에 품고 인천지역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거리로, 광장으로 나섰습니다. 응축된 시민의 힘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했으며, 기본권적 자유와 권리의 회복을 위해 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인천 5.3민주항쟁을 통해 응축된 시민의 힘은 1년 뒤 뜨거웠던 6월 항쟁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인천5.3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과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과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을 바꾼 계기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와 발자취를 제대로 정립하고 온전히 계승·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자,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이를 기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고난의 역사를 헤쳐온 인천5.3민주항쟁이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기억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기탄없이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홍근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의원 김성환입니다. 인천 5.3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토론회가 마련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김교홍, 윤관석 의원님과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에 감사드리며, 좌장을 맡아주신 김창수 인하대학교 교수님, 발표를 맡아주신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우재 이사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인천 5.3 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벌어진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민주화운동으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민주화 운동사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현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는 이 5.3민주항쟁이 민주화 운동의 정의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그 의미에 맞는 역사적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는,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고, 앞으로의 남은 과제를 되짚으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한 인천5.3민주항쟁을 정의규정에 추가하는 소중한 걸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토론회가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뜻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법 개정예 앞장서 인천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3. 03. 08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환



한창섭 /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한창섭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천5.3민주항쟁의 의미’를 재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기획하고 준비해주신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홍 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함께 참여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과 인천5.3민주항쟁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련 단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서 많은 위기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힘 중 하나가 민주화운동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2001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제정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함께 민주화운동 기념·추모사업뿐만 아니라 사료 수집, 학술지원·연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5.3민주항쟁과 관련하여서는 민주화보상위원회가 73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 외에도 각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하고 후세에 전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천5.3민주항쟁 역시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민주항쟁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이러한 인천5.3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논의하고 상호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민주화운동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있는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한창섭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장 유정복입니다.

오늘‘인천5.3민주항쟁’의미를 되새기면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교흥 국회의원님, 윤관석 국회의원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관계자 여러분,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해주신 전문가 모든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인천5.3민주항쟁은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최대규모 민주화운동입니다. 6월 항쟁 도화선이 된 민주화 운동사에서 중요한 사건임에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으로 인정하는 민주화운동에 제외돼 있습니다.

인천5.3민주항쟁이 역사 뒀안길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천5.3민주항쟁 법적지위 확립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건립을 위한 국비지원 근거가 마련됨은 물론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인천의 자랑스러운 역사인‘인천5.3민주항쟁’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앞당긴 중요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8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illegible]

발제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

이우재 (사)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1 들어가기

1986년 5월 3일 인천 주안 구시민회관 일대에서 1980년 5월 광주민주항쟁이 전두환 일당의 총칼에 의해 잔인하게 진압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다. 민통련과 인사연을 위시한 민주화운동 진영 1만여 명, 시민 4만여 명, 도합 5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날의 시위는 87년 6월항쟁이 일어날 때까지 가장 큰 시위였으나(김창수, 『인천5.3민주항쟁의 성격과 위상』, 『인천5.3민주항쟁 연구논문집』, 297쪽), 이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부정적이기만 하다. 우선 명칭 자체도 대부분 5.3사태로 표현하고 있으며, 인천5.3민주항쟁이라는 표현은 어쩌다 간혹 보일 정도이다. 마치 80년 5월의 광주민주항쟁이 전두환정권 시절 광주사태라고 불리어졌던 것과 흡사하다. 5.3사태라는 표현 속에는 그날의 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전제되어 있다. 그것은 그날 시위에서 발생한 일부 단편적인 현상만을 강조하여 그날의 시위의 의미를 애써 평가절하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모든 역사적인 사건에는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 우리가 국경일로 기념하는 3.1운동만 해도 그렇다. 만세운동으로 일본을 물리쳐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정말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렇기에 3.1운동은 많은 희생자를 낳은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3.1운동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전민족의 불같은 열망이었음이 확인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 87년의 6월항쟁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된 6월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6월항쟁이 직선제 개헌은 쟁취했지만, 군사독재 타도에는 실패하여 결국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에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합법성을 부여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평가하려면 한 단면만을 집착하지 말고 긴 역사적 맥락에서 사건 전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간의 역사는 직선이 아니다. 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통하여 앞으로 전진해 갔다. 인간의 역사에서 100% 성공은 없다. 성공 속에도 실패가 내재되어 있으며, 실패는 그에 대한 반성을 통하여 미래의 성공의 담보가 된다. 그렇기에 모든 역사적 사건을 평가할 때는 긴 역사적 맥락에서 전후좌우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1986년 5월 3일 인천 주안에서 발생한 시위(이하 5.3시위)도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아야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냥 한 단면만 보서는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없다. 이하에서는 그동안의 5.3시위에 대한 평가가 무엇에 집착하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긴 역사적 맥락에서 전후좌우를 함께 살핌으로써 5.3시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그 역사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2 그동안의 5.3시위에 대한 평가와 그 문제점

1986년 5월 3일의 시위를 5.3사태라고 부르게 된 것은 당시 전두환정권이 이 시위를 극렬좌경용공세력에 의한 체제전복기도로 몰아간 것이 결정적이었다. 전두환정권은 이 시위를 민주화운동세력을 전면적으로 탄압하기 위한 명분으로 이용하기 위해 시위의 폭력성과 당시 유인물 등에 나타난 구호들의 급진성을 언론기관을 통하여 전국민에게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리하여 민주화운동세력을 극렬좌경용공세력이라 불렀고, 이날의 시위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체제전복기도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당시 일반적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가담자들에게 적용해 왔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신 형법 115조 소요죄를 적용하여 그날 시위에서 연행한 사람 129명을 구속시켰다. 즉 이날의 시위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아니라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일으킨 소요라는 것이다. 전두환정권이 그렇게 몰고 가기 위하여 이날의 시위에서 크게 부각시킨 것은 다음의 3가지다.

1) 신민당 개헌추진위 결성대회의 무산

첫 번째는 5월3일 주안 시민회관에서 2시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던 신민당의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지부 결성대회 및 현판식(이하 결성대회)이 시위대의 방해로 무산되었다는 점이다. 전두환정권은 신민당과 민주화운동진영을 이간질하기 위하여 이 점을 계속 강조해 왔고, 그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이 문제는 5.3에 대한 여러 정의와 평가에서 특별히 강조되어 왔다. 예를 들어 『두산백과』는 5.3을 정의하기를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신한민주당의 개헌추진위원회경인지부 결성대회가 운동권의

시위로 무산된 사건”이라고 하였고, 『한국근대사사전』(2005)는 “1986년 5월 3일 신민당 <직선제개헌 1천만명 서명운동> 인천 및 경기도지부 결성대회가 운동권의 격렬한 시위와 공권력의 무력 진압으로 무산된 사건”이라고 하고 있다(김창수, 『인천5.3민주항쟁의 성격과 위상』, 『인천5.3민주항쟁 연구논문집』, 295쪽). 즉 민주화운동진영이 전두환정권에 반대하여 직선제개헌을 추구하고 있던 야당인 신민당마저 타도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결성대회를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그날 결성대회가 무산된 것은 주안역에서 내려 결성대회 장소인 시민회관까지 걸어 행진하고자 했던 김영삼, 이민우를 비롯한 신민당 지도부가 “신민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야유를 보낸 시위대와 이미 난장판이 되어버린 시민회관 일대의 상황에 질려 대회장 입장을 포기한 데서 기인했다. 그런 면에서 운동권의 격렬한 시위 때문에 대회가 무산되었다고 한 위의 해석이 틀렸다고 말할 순 없다. 그러나 거기에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실 하나가 있다. 즉 그런 상황은 신민당이 자초했다는 것이다.

1986년 4월 28일 신민당 총재 이민우는 “민주화를 위한 학생들의 투쟁은 지지하지만 최근 일부 학생들의 과격한 주장은 지지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이는 그날 “양키 고 홈”을 외치며 서울대 학생 김세진, 이재호가 분신자살한 데 대한 우려의 반응이었지만 민주화운동과 일정한 선을 긋겠다는 분명한 의사 표시였다. 그리고 이어 4월 30일에는 청와대에서 전두환과 회담하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여야가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 일정 등을 합의하면 임기 내 개헌이라도 (전두환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이는 전두환과 이민우 사이에 뭔가 밀약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크게 불러 일으켰다. 당시 정치권에는 미국의 압력으로 전두환과 신민당 사이에 보수대연합이 이루어져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할 것이라는 소문이 자자했다. 청와대 여야영수회담은 그 소문을 더욱 확신케 하는 것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이민우는 청와대회담에서 “소수이겠지만 좌익 학생들을 단호히 다스려야 하며 민주화운동에 이런 사람이 끼어서는 안 된다”고 발언함으로써 학생들에 대한 탄압을 묵인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혔다. 이는 불난 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다. 학생들을 비롯하여 민주화운동 진영이 신민당에 대해 칼날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그 원인을 살펴보지 않고 결과만 갖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2) 폭력 시위

두 번째는 시위의 폭력성이다. 이는 이후 각 언론기관에서 5.3시위를 보도하며 붙인 제목만 봐도

분명하다. KBS는 당일 보도에서 보도 제목을 “‘폭력난동’ 좌경용공세력의 체제전복 기도”라고 하였고, 동아일보는 5월 5일 신문에서 “급진세력의 폭력은 민주화에 역행한다”라고 타이틀을 뽑았으며, 한국일보는 5월 20일에서 23일에 걸쳐 “급진학생, 과격재야가 소요 유도”, “인천사태 민민투, 민통련이 주도, 민중봉기 유발 노려”라고 제목을 달았다(김창수, 『인천5.3민주항쟁의 성격과 위상』, 『인천5.3민주항쟁 연구논문집』, 281쪽). 그리고 TV에서는 5.3을 보도할 때마다 시민회관 사거리에 있던 민정당 지구당사가 불타는 모습, 전투경찰이 시위대에게 구타당하는 모습, 그리고 시위대가 화염병과 보도블록을 투척하는 모습, 깨진 보도블록이 즐비하게 깔린 길바닥의 모습 등만 보여줌으로써 이날 시위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나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었다. 5.3시위에 대해 전두환정권이 적용한 형법 115조 소요죄의 소요라는 말 자체가 이날의 시위가 정상적인 시위가 아니라 폭력 난동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시위의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민민학련 학생들이 5월 3일 자정을 기하여 경기도경을 점거하려 했다는 경기도경 점거설도 발표하였다. 즉 5월 3일 23:00~24:00 민민학련 학생들이 동인천역 앞으로 진출하여 군중대회를 개최한 후 경기도경을 점거키로 했다는 것이다(김창수, 『인천 5.3민주항쟁의 성격과 위상』, 『인천5.3민주항쟁 연구논문집』, 293쪽).

우선 경기도경 점거설에 대해 살펴보면 그것은 아무런 사실 관계도 뒷받침되지 않은 의도적인 날조였다. 검거된 민민학련 학생들이 그런 진술을 했다고 했으나, 누구도 그런 진술을 한 바가 없으며, 만일 정말 그랬다면 그건 소요죄가 아닌 다른 죄목으로 처벌받았어야 할 큰 범죄였다. 그러나 그렇게 처벌받은 학생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그것이 의도된 조작이었음을 결정적으로 밝혀주고 있다.

민정당 지구당사 방화 사건도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이다. 그렇게 신문과 방송에 대대적인 보도를 했으면 마땅히 방화범을 찾아내어 처벌했어야 하는데, 5.3으로 구속된 사람들 중 누구도 방화범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 인하대생 이용주가 고문에 못 이겨 자기가 방화했다고 자백했으나, 그것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으며, 따라서 이용주는 방화죄로 처벌받지 않았다. 민정당 지구당사 방화 사건은 아직까지 미해결인 상태로 남아 있다.

그날 시위에 화염병과 보도블록이 난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깔려 있다. 광주항쟁을 겪고 난 이후인 1980년대의 시위가 그 이전의 시위와 다른 점 중 하나가 시위대가 화염병을 자주 투척했다는 점이다. 그 현상은 1970년대의 시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80년 광주민주항쟁 때문이었다. 전두환일당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제 나라 국민을 향해 총을 난사하며 학살했다. 즉 제 나라 국민을 적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데려다 무자비한 고문을 가하였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민주화운동 진영도 자연스럽게 전두환정권을 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전두환정권은 민주화운동 진영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민을 총칼로 죽이면서 정권을 강탈해 간 적이었다. 총칼을 휘두르는 적을 상대하자면 마땅히 우리도 총칼로 상대해야 했으나 총칼을 구비할 조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최선으로 생각해낸 것이 화염병이었다. 그래서 각종 시위에서 화염병이 투척되었던 것이다. 화염병과 보도블록은 5월 3일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각종 시위에서도 자주 사용되었으나, 5월 3일의 시위가 워낙 컸기 때문에 화염병과 보도블록이 난무한 것처럼 보인 것이다. 그리고 그 사용도 전두환 일당의 폭력성, 야만성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그것을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결과만 갖고 논하며 폭력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3) 좌경용공집단

세 번째로 전두환정권이 부각시킨 것은 이날의 시위를 일으킨 집단이 좌경용공집단이라는 것이다. 당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비슷한 것도”(중앙일보 1986년 5월 5일), “좌익 정체 드러낸 인천사태”(경향신문 1986년 5월 5일), “사회존립 위협하는 좌익난동의 실체”(서울신문 1986년 5월 6일) 등의 표현이 있는데, 한마디로 북한을 동조하는 좌익용공 집단이라는 것이다(김창수, 「인천5.3민주항쟁의 성격과 위상」, 『인천5.3민주항쟁 연구논문집』, 281쪽). 특히 문제시한 것은 이날의 시위에서 등장한 반미 구호였다. 미국을 반대하니 좌익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 살포된 유인물에 등장하는 “노동해방”이나 “인천을 해방구로”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다. 그런 주장을 하니 좌경용공집단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문제시된 반미 구호는 사실 그동안의 미국의 행적이 불러들인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었지만 전두환 일당이 광주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무자비한 살상을 전개할 때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전두환 일당의 양민 학살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다. 거기에 1985년 2.12 총선 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들고 나온 신민당이 제1 야당으로 부상하면서 개헌 문제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을 때 미국의 행동은 사실 전두환 일당을 두둔하는 것처럼 보였고, 뒤에서 민주화운동 진영을 배제한 보수대연합을 부추기는 언동을 보였다(윤영상, 「인천5.3민주항쟁의 정치적 성격과 의미」, 『인천5.3민주항쟁 연구논문집』, 67-68쪽). 5.3 시위에서 나타난 반미 성향은

이러한 당시 정황의 산물이었다. 그것을 갖고 좌경용공으로 매도하는 것은 원인은 살펴보지 않으면서 나타난 결과만 갖고 판단하는 격이었다.

“노동해방”이니 “인천을 해방구로”라는 구호 속에 등장한 해방이란 표현은 억압과 착취에서 벗어나자는 뜻을 담은 말로 그 말을 사용한다고 해서 좌경용공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었다. “노동해방”이란 말은 노동자들이 당시 전두환정권의 비호 하에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의미였고, “인천을 해방구로”라는 구호는 오늘 이 순간 이곳 인천에서부터 전두환일당의 독재로부터 벗어나자는 뜻이었다. 해방이란 말은 공산주의자들만이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었다. 8.15해방이란 말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5.3 시위를 좌경용공세력에 의한 체제전복기도라고 규정하며 신문과 방송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선전을 가했던 전두환정권이었으나 실상 5.3 시위로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는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만일 좌경용공세력이 일으킨 소요라면 보다 더 처벌이 엄한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어야 옳았다. 이는 전두환정권조차 이 사람들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치하고 있었지만, 다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의도적으로 좌경용공집단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3 민주화운동사의 관점에서 본 5.3시위

5.3 시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신민당의 개헌 현판식이 무산되었고, 시위 현장에 최루탄뿐만 아니라 화염병과 보도블록이 난무했고, 당시 국민들에게는 좀 낯선 생경한 구호들이 터져 나온 것을 갖고 전두환일당이 좌경용공세력에 의한 체제전복기도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가하면서 5.3사태라고 규정한 이후 이에 대한 해석은 크게 변한 바 없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물론 일부 진보적인 학자들이 5.3시위를 인천5.3민주항쟁이라고 부르는 등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애쓰고 있지만 아직도 인터넷을 뒤져보면 5.3사태라는 표현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도 사태라는 용어 자체가 갖고 있는 부정적 의미 그대로이다. 위에서는 그런 부정적 평가가 앞뒤 맥락을 살펴보지 않고 결과 하나만 갖고 따진 단편적인 것이며, 그것조차 전두환정권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되었음을 밝혔다. 여기에서는 5.3시위가 민주화운동의 전개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5.3시위가 민주화운동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찾는 단초를 세우고자 한다.

1) 신민당의 개헌추진위 결성대회 무산이 가져온 파장

신민당의 개헌추진 결성대회가 무산된 것은 민주화운동 진영의 입장에서는 보수대연합에 대한 우려와 분노의 당연한 표시였지만, 신민당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리고 그들도 시위 현장에 나타난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양김씨와 신민당은 5월 7일 인천대회가 정부여당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되었다고 비판하면서, 군사정권의 종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통령 직선제를 밀고 나갈 것이며, “재야지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민주화를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인천대회에서 나타난 대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신민당에 대한 비판적 충고를 개헌투쟁과정에서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정당과 일각의 보수대연합론을 비판하면서 ‘허황한 발상’이며, “민정당과 연합할 보수세력은 민주세력 안에는 없다”고 단언하였다(윤영상, 『인천5.3민주항쟁의 정치적 성격과 의미』, 『인천5.3민주항쟁 연구논문집』, 68쪽). 즉 민주화운동진영이 보수대연합에 대한 우려와 분노에서 신민당의 결성대회를 방해한 것이 거꾸로 신민당으로 하여금 민주화운동 진영과의 연대를 다시 굳건히 하도록 작용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87년 5월 27일 양김씨와 민주화운동 진영 모두가 결합한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여 6월항쟁을 이끌었고, 마침내 6.29선언을 얻어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천5.3시위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시위에서 민주화운동진영이 신민당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과연 있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2) 폭력 시위에 대한 반성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던 5.3 현장의 시위 모습은 그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폭력은 쌍방관계라 전두환정권의 야만적인 폭력 탄압이 멈추지 않는 이상 시위대도 방어적인 차원에서라도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진영은 5.3시위를 겪으면서 폭력시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5.3시위 현장에서 바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현상 때문이었다. 다름 아니라 시위 현장의 폭력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대중의 참여는 어려워진다는 것이었다. 화염병은 만들 수 있는 사람, 던져 본 사람들만이 준비해 와 던지는 것이지, 일반 시민이 쉽게 만들고 던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최루탄과 화염병이 난무하고 곤봉과 보도블록이 서로 교차하는 시위 현장은 조직된 사람, 훈련된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시민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곳이었다. 86년 5월 3일 주안 시민회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는 결국 나중에는 일반 시민은 다 떠나고 없이 민주화운동 진영의 조직된 사람들만이 남아 전개하는 양상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나 국민 대중의 지지와 참여 없이는 민주화운동의 성공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였다. 민주화운동 진영은 5.3시위를 겪으면서 자기들만의 치열한 투쟁이 아니라 좀 덜 치열하더라도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투쟁 방법을 모색했고, 그것이 나타난 바가 바로 6월항쟁이였다. 5.3시위는 민주화운동 세력으로 하여금 자기들만의 치열한 시위는 결국 대중으로부터의 고립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반성하며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법을 모색하게 한 결정적 계기였다.

그러나 전두환일당의 대응은 달랐다. 그들은 5월 3일의 시위를 야만적 폭력으로 진압한 후 이어 연행해 간 사람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고문을 서슴지 않았다. 인하대생 이용주는 그 고문을 못 이겨 민정당 지구당사를 자신이 불질렀다고 허위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6년 전 광주에서처럼 폭력으로 민주화운동을 잠재울 수 있다고 착각한 그들의 만행은 끝을 몰랐고, 급기야 6월 부천경찰서에서 5.3시위 관련 수배자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여대생을 발가벗겨 성고문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전두환일당의 계속되는 폭력에 국민들의 분노는 깊어만 갔으나, 그들은 거기서도 폭력을 멈출 줄 몰랐다. 결국 87년 1월 14일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살해당하는 비극이 터지고 말았다. 그리고 전두환일당의 폭력에 안으로 쌓여만 갔던 국민의 분노는 마침내 활화산처럼 터지고 말았으니 그것이 바로 6월항쟁이였다.

86년 5월 3일 인천 주안 사거리 일대는 최루탄과 화염병, 곤봉과 보도블록이 난무하는 폭력의 현장이였다. 그러나 그 이후 민주화운동 진영은 지나친 폭력은 결국 대중으로부터의 고립만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을 찾아 나섰다. 그렇지만 전두환일당은 폭력으로 민주화운동을 잠재울 수 있다고 착각하고 계속 폭력의 길로 매진하였다. 그 결과가 87년 6월항쟁이며 6.29선언이였다. 5.3시위는 6월항쟁으로 가는 반성적 계기였다.

3) 좌경용공집단?

전두환일당이 민주화운동 진영을 좌경용공집단으로 매도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것이 민주화운동 진영의 반미적 성향이었다. 6.25전쟁 이후 반미 무풍지대였던 대한민국에서 반미 구호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도 밝혔듯이 바로 광주민주항쟁 때문이었다. 82년의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85년의 서울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도 바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전두환일당의 광주시민 대량 학살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여기에 불을 지른 것이 직선제개헌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치정국에서 미국이 보인 애매한 태도들이였다. 당시 미국이 보인 애매한 태도는 보수대연합의 배후에 미국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러나 미국도 5.3시위에서 드러난 시위 군중들의 거센 반미감정을 확인하고는 자기들의 입장을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윤영상, 『인천5.3민주항쟁의 정치적 성격과 의미』, 『인천5.3민주항쟁 연구논문집』, 67-68쪽). 그것은 87년 6월항쟁을 전두환정권이 군대를 동원하여 진압하지 못했다는 것만 봐도 자명하게 알 수 있다. 80년 5월 광주에서 그렇게 잔인하게 살상을 자행했던 자들이 또 다시 군대를 동원하여 민주화운동을 짓밟으려 했으리란 것은 너무도 뻔했기 때문이다. 결국 5.3시위에서 터진 거센 반미의 구호가 미국으로 하여금 입장을 바꾸게 만들어 6월항쟁의 성공에 일조하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5.3시위 현장에서 살포된 유인물 등에 나타난 “생활임금”이니 “노동해방”이니 하는 낯선 용어들도 전두환정권이 좌경용공을 들먹일 때마다 꼭 들고 나오는 단골 메뉴이다. 즉 그런 용어 자체가 좌경용공적이라는 것이다. 지금이야 누구도 귀담아 듣지 않는 천박한 이야기이지만 당시는 낯선 것만큼이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솔깃하게 들렸던 것도 사실이다. 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 왜 노동자, 농민을 들먹이냐는 것이다.

민주화운동 진영에서 노동자, 농민을 언급하게 된 데는 1970년 11월 발생한 전태일 열사의 분신자살 사건이 결정적이었다. 그 사건 이후 지식인, 대학생 중심이었던 민주화운동진영에서 노동자의 비참한 생활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점차 노동자, 농민 등 국민 대중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 민주화는 알맹이 없는 빈 쪽정이 민주화에 불과할 뿐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은 80년 광주민주항쟁의 실패를 겪으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민주화를 이루려면 결국 마지막에는 총칼로 무장한 군인들과 맞서야 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생만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 국민 대중이 나서야 되는데, 그 국민 대중의 대다수는 노동자, 농민이었다. 노동자, 농민을 민주화운동 진영에 끌어들이 조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살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까지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니 바로 당신들의 삶의 문제다. 그러니 같이 하자.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인식이 노동 문제, 농민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만들었고, 그 고민이 드러난 것이 바로 “생활임금”이니 “노동해방”이니 하는 구호였다. 생활임금이란 말은 노동자의 임금은 바로 노동자도 인간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뜻이었고, 노동해방이란 말은 노동자를 억누르는 모든 억압과 착취로부터 노동자가 해방되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지금 들으면 자명한 이야기이지만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 했다. 그만큼 군사독재 아래서 그런 말들이 금기시되었던 것이다. 거기에서 군사독재와 싸워 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에 수많은 희생이 따를 텐데 그런 희생 끝에 얻은 민주화에는 그 희생만큼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 즉 사회 개혁, 즉 사회민주화까지 함께하자는 생각도 담겨 있었다.

시대를 앞서간 듯한 민주화운동 진영의 고민은 그 당시에는 많은 호응을 얻지 못했다. 6월항쟁 과정에서 한반도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구호도 “독재타도 호헌철폐”, “대통령을 내 손으로” 등의 정치적 구호였고, 6월항쟁의 결과물인 6.29 선언에도 그런 내용은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고민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6월항쟁에 이어 곧 일어난 7.8월 노동자대투쟁은 바로 그러한 고민들의 발로였고, 그 고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노동운동, 농민운동 등 국민 대중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운동을 관통하고 있다. 5.3시위에 나타난, 전두환정권에 의해 좌경용공이라고 매도당한 그 고민들은 사실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이정표였고, 이후 대중운동을 지도할 핵심 이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5.3시위는 선지적이었던 셈이다.

4) 분열된 모습은?

5.3시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당시 모인 민주화운동진영이 통일된 단일 대오를 갖추지 못한 채 각자 자기들끼리 모여 자기들만의 주장을 펼치는 극심한 분열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자민투와 민민투로, 재야단체는 민통련, 인사연 계열과 서노련, 인노련 계열 등으로 분열되어 각자 따로 집회를 열었다. 그러한 난맥상이 5.3시위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더욱 강하게 심어준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두환 폭압 체제 아래서 민주화운동진영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 전두환일당은 민주화운동이라면 무조건 반국가단체나 용공이적단체로 몰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하였다. 그리고 연행되어 가면 고문은 일상이었고, 결국 고문에 의한 자백 끝에 조직이 일망타진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나아가 조직을 확대하려면 지하로 파고들 수밖에 없었고, 점조직 형태로, 또는 소그룹 위주로 조직할 수밖에 없었으며, 타 그룹, 타 조직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지극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타 조직과의 연계나 올바른 운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상황이었다. 5.3시위의 분열상은 그런 상황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전두환정권의 폭압 속에서 민주화운동세력이 80년 광주 이후 최대의 시위라는 5.3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전술로 살아남았고, 나아가 조직과 역량을 확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신민당과 별도의 독립된 세력으로서의 민주화운동진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음을 온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화운동진영은 그런 소그룹주의, 비밀주의, 폐쇄주의를 통해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 5.3시위는 그러한 방식의 운동의 정점이었다. 그리고 그 정점인 것만큼 그 한계도 여실히 드러낸 것이 5.3시위였다. 그런 방식으로 운동 역량을 보존하고 발전시킬 수는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5.3시위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국민대중과 함께해야 했다. 그리하여 실현된 것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였고, 그 국본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쟁취되었다. 5.3시위는 그 변화를 이끌어낸 결정적 사건이었다.

4 인천5.3시위의 역사적 의미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5.3시위로 신민당의 결성대회가 무산되었으나 그것은 신민당이 자초한 것이고, 오히려 그 시위를 통해 신민당은 그간 자신들이 연연해 왔던 보수대연합 등에 대한 민주화운동 진영의 우려와 분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신민당은 다시 민주화운동진영과의 연대에 나섰고, 결국 함께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6월항쟁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5.3시위는 신민당을 6월항쟁으로 이끈 방향타였다.

* 5.3시위의 폭력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전두환정권이 발표한 민정당 지구당사 방화와 경기도경 점거설은 아무 근거가 없는 날조된 사실이다. 5.3시위 현장이 최루탄과 화염병, 곤봉과 보도블록이 난무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총칼로 학살하고, 그후 고문을 일상화한 전두환일당의 폭압 아래서 민주화운동세력이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5.3시위 이후 민주화운동진영은 폭력이 결국 국민의 동참을 어렵게 할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국민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투쟁 전술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타난 게 6월항쟁이었다. 그러나 전두환정권은 야만적 폭력을 그치지 않았고, 결국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폭압 아래 눌러 있었던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고, 그것이 바로 6월항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5.3시위는 민주화운동진영을 6월항쟁으로 이끈 터닝 포인트였고, 국민대중을 6월항쟁으로 이끈 도화선이었다.

* 5.3시위에서 나타난 민주화운동진영의 반미감정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80년 5월의 광주 학살을 묵인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에서 비롯되었고, 개헌 문제를 둘러싸고 전두환일당과 신민당의

타협을 종용하는 듯한 일련의 모습에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도 5.3시위로 보수대연합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을 알게 되면서 그러한 입장을 바꾸게 되었고, 그 결과가 6월항쟁 과정에서 보여진 군대의 중립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5.3시위에서 나타난 반미 구호가 오히려 군의 정치적 중립을 가져와 6월항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 5.3시위에서 언급된 생활임금이니, 노동해방이니 하는 당시로선 좀 생경한 구호들은 민주화가 단지 정치만의 민주화가 아닌 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되어야 한다는 민주화운동진영의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즉 민주화된 사회는 국민 모두가 주인되고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것은 아직도 실현이 멀지만 지금 각 부문에서 전개되는 대중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의미에서 5.3시위는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요,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 5.3시위에서 보여진 민주화운동진영의 분열상은 전두환일당의 폭압 아래서 살아남기 위한 민주화운동진영의 교육지책에서 비롯되었다. 민주화운동진영은 전두환일당의 야만적인 폭력 아래서 그런 모습으로밖에 생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배양한 역량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 5.3시위였다. 5.3시위로 민주화운동진영이 신민당을 비판할 정도로, 그리고 독자적으로 그런 큰 시위를 조직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일 수는 있었으나, 그것이 한계였다. 민주화운동진영만으로는, 그리고 자기만이 옳다는 배타적이고 분열된 자세로는 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없었다. 5.3시위는 민주화운동진영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였고, 국민대중과 함께하며, 국민대중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그것을 통해 서로의 차이를 해소해 가는 과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였고, 그것이 실현된 것이 바로 6월항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5.3시위는 민주화운동진영으로 하여금 자기반성을 통하여 6월항쟁으로 이끈 성찰의 장이었다.

이상 5.3시위를 그날 현장의 단편적인 모습이 아니라 긴 민주화운동의 역사 속에서 전후맥락을 통하여 파악해 보았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5.3시위는 민주화운동진영뿐만 아니라, 신민당, 미국,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전두환일당까지도 6월항쟁으로 이끈 방향타요, 도화선이었다고 그렇다. 1986년 5월 3일 인천 주안사거리 일대에서 일어난 인천5.3시위는 6월항쟁의 도화선이요, 방향타였다. 그런 의미에서 그날의 시위는 더 이상 5.3사태라고 불러서는 안 되며, 마땅히 인천5.3민주항쟁이라고 불러야 한다.

MEMO

토론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 토론문

이영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장

인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 토론문¹

이영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부장)

① 한국 민주화운동의 역사화와 ‘5.3시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발간한 연구서에서 ‘5.3시위’는 ‘인천 5·3항쟁’(『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 3』, 2010), ‘5.3인천 투쟁’(『6월민주항쟁: 전개와 의의』, 2017) 등으로 표기되고 있다. 발표문에서와 같이 민주화 운동 세력의 최대 동원이었다는 점과 동시에 분열과 억압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히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수많은 사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민주화운동 역사화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민주화운동의 역사화는 학술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진행된다. 우선 민주화운동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가장 권위 있는 근거이자 토대가 된다.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발생한 사건의 특성상 공적인 자료들은 보도지침 등이나 공안 사건화하기 위해 왜곡·조작된 자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부 시기에는 보도 통제로 사건 자체가 기록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수사자료나 정보기관의 자료들은 조직적으로 파기·은폐되기도 했다. 이러한 민주화운동 사건들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연구하여 의미를 밝히는 작업이 없는 민주화운동 기념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학술적 성과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행된 기념·계승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왜곡과 편협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학술지 인용색인(KCI) 검색 결과에 따르면 ‘5.3’ 관련 연구논문은 지금까지는 많지 않다. ‘5·3시위’가 민주항쟁으로 정립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충분한 학술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일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간 광범위한 지역과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는 특징(이영제, 2021)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화 과정에서 수많은 민주화운동 사건이 발생했다. 중요하지 않은 민주화운동 사건은 없고, 그 과정에서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는 공적 차원에서 예우함이 마땅하다. 그렇다고 모든 민주화운동 사건을 병렬적으로 동일선상에 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4월 혁명,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사건은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어 국가적 수준에서 기념되고 있으며, 6월 항쟁은 국가적 수준에서만 아니라 지역적 수준에서도 기념되고 있다. 4·19혁명을 제외한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 기념일은 비제도적 차원이나 지역 차원에서 기념되어 오다가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1 본 토론문은 토론자의 의견으로 토론자가 속한 기관의 공식 견해가 아님.

현재 민주화운동이 역사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술적 논의와 성과의 축적, 지역 차원에서 기념사업의 활성화 등도 중요하지만 다른 조건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주화운동은 과거에 진행된 사건이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은 과거에 대한 기념과 성찰을 넘어 현재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세력 관계를 반영될 뿐만 아니라 ‘예산’과 같은 재정적 측면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5.3시위의 과거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자산의 확충의 차원에서라도 5.3시위가 현재에 인천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② ‘인천 5.3 시위’에 대한 기념

추상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2.12총선을 통해 제도적으로 표출되었다. 이후 ‘5.3시위’는 6월항쟁으로 이어지는 개헌 정국에서 ‘직선제’에 대한 민주화운동 세력의 의지, 강도를 확인하는 계기였다. 더 나아가 요구하는 민주화의 방향과 민주주의 내용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적 사건이다.

인천5.3시위가 민주화운동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법적으로도 인천5.3시위는 민주화운동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에서 민주화운동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2조(민주화운동)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1.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10항쟁,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이 그것이다. ‘인천5.3시위’는 위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민주화운동 정의에 포함된다.²

『민주화운동 백서』에 따르면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천5·3시위에

2 민주화운동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념·계승하는 사례는 주요 정당의 강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국민의 힘 강령에서는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 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 운동 등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산업화 세대의 ‘조국 근대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의거, 3·15 의거, 4·19 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헌법적 법통, 그리고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의 위대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

대해서는 “인천5·3시위(5.3항쟁)”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 인천5·3시위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의 경기·인천지부 결성대회가 예정되어 있던 1986년 5월3일 인천에 다수의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민족·민주·민중헌법쟁취, 직선제개헌, 노동자해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고, 시위군중이 불어 수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항쟁으로 발전했다. 정부당국은 ‘인천5·3시위’를 좌경용공세력의 반정부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시위 참여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와 수배에 돌입, 129명을 구속, 37명을 수배조치했다. 정부당국은 이들을 구속하면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최초로 형법상의‘소요죄’를 적용하여 처벌했다. 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인정 분포를 보면 신청 85건, 인정 73건이다. 12건은 불기소, 수배 등 민주화보상법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인정되었다. 참여자들의 인적 구성을 보면 학생 40명, 노동자 14명,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20명, 종교인·교사·정당인·기타 11명이다.

항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지만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는 ‘인천5·3시위’를 ‘항쟁’으로 분석하고 있다.³

‘인천5.3시위’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간에 기념하고 계승해야 하는 중요한 민주화운동이다. 2·28이 대구를 대표하는 민주화운동이고 3.8이 대전을 대표하는 민주화운동이라면, 5.3은 인천을 대표하는 민주화운동이다. 2.28과 3.8등을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그것이 특정한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있어 특정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2015. 『민주화운동백서』.

서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편.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10. 『한국민주화운동사 3』. 경기도: 돌베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엮음. 2017. 『6월민주항쟁: 전개와 의의』. 경기도: 한울아카데미.

이영제. 2021.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과 기념·계승의 과제’. 『한국과 국제사회』 제5권 6호. 239~268쪽.

3 민주항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는 않다. 항쟁으로 불리는 사건으로는 기념일로 지정된 6·10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이 있으며, 지역에서 기념식을 거행하는 항쟁으로는 인천 ‘5.3 민주항쟁’과 ‘사북민주항쟁’이 있다. 그 외에 5.18민주화운동이 ‘광주민중항쟁’으로 불리기도 한다. ‘민주’라는 것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항쟁이라는 의미임을 감안한다면, 시민 다수의 참여와 지지, 시위의 규모와 지속성, 사건의 영향과 파급력 등이 항쟁의 정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5·3민주항쟁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환점이다

박인규 (사)시민과대안연구소 소장

5·3민주항쟁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전환점이다

(사)시민과대안 박인규 연구소장

5·3민주항쟁의 성격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는 부정에서 긍정으로 변화되어 왔다. 발제자는 5·3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근거가 되어 온 3가지 측면 즉 신민당 개헌추진위 결성대회 무산의 책임성, 5·3시위의 과정에서의 폭력성 및 시위대 주장의 좌경용공성에 대해서 민주화운동세력의 오류와 한계를 제시하면서도 그 부정적인 평가의 의도성과 부당함과 더불어 당시 상황에서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당시 상황에서의 불가피성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사의 긴 안목에서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에 이정표를 찍은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토론자도 깊이 공감하면서도 단순한 한계나 불가피성을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드러내고자 한다.

방어적 폭력은 폭력이 아니다.

5·3시위가 가진 부정적인 평가의 근거는 민주화운동세력의 부분적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광주민중항쟁을 총칼로 짓밟고 등장한 전두환 정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가피성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가 전혀 보장되지도 않고 사전 봉쇄되거나 시작과 동시에 순식간에 진압되어 버리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대중들에게 좀 더 길고 강렬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투쟁 현장에서 경찰에 맞서 돌과 화염병으로 대항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 의미에서 5·3시위에서 나타난 시위 방식의 격렬성은 민주화를 바라는 다수의 대중들이 비교적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신민당 개헌추진위원회 인천·경기 지부 결성대회 및 현판식을 활용하면서도 그 한계를 넘어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문제는 폭력이라는 수단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인 것이다.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불법 체포, 연행, 구속, 고문, 살인을 늘상 자행하는 군사독재정권의 폭력에 비하면 민주화운동세력의 대응은 차라리 온건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많은 희생을 치른 민주화투쟁 끝에 쟁취한 합법적인 민주정부를 군부쿠데타를 통해 전복하고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을 총칼은 물론 전투기와 전차까지 동원하며 학살하는 미얀마 군부세력들의 만행에 맞서 총칼을 들고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과격한 폭력집단이라 규정할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얼마나 있을까?

극히 일부의 극우 인사들이 여전히 광주민중항쟁을 북한군의 개입에 의한 폭력투쟁으로 매도하고는 있지만 항쟁 기간 보여준 광주시민들의 무장 항쟁을 폭력집단의 난동으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표방하는 모습을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찾기 어렵다. 이미 국가가 광주항쟁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합법화하여 기념해 온지 오래다. 아마도 광주학살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현 정부 고위 인사들 중에서도 우리의 광주항쟁과 꼭 닮은 미얀마 민주항쟁을 폭력적이라 하여 비판하는 인사들을 단 한명이라도 본적이 있는가? 광주와 미얀마에서 보여준 항쟁의 수단이 무장투쟁이라면 그것은 군대와 경찰이라는 국가의 합법적인 폭력수단을 무도한 세력들이 불법적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한 방어적인 폭력일 뿐이다. 그러기에 전두환 정권과 미얀마 군사정권이 시공간을 넘어선 독재의 쌍둥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폭압적인 탄압에 맞선 5·3시위 과정에서의 폭력성은 광주민중항쟁과 미얀마 민중항쟁의 무장항쟁에 비하면 폭력이라 말하기에는 그 규모와 격렬성에서 비교하기조차 힘든 것이며, 오히려 그 정당성만을 부여해 줄 뿐이다.

5·3시위를 민주화운동의 승리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5·3시위에서의 과격한 투쟁과 다소 급진적인 구호들은 군사독재 정권의 공작으로 민주화운동세력이 민중들로부터 분리되는 좌경적 오류를 범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 못지않게 더 큰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5공화국 출범 이후 내내 산발적이고 소규모적인 투쟁을 이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 광주민중항쟁 이후 최대의 시위라고 평가 되듯이 대규모로 민주화운동세력이 한 날 한시에 한 장소에 집결하여 강고한 대치전을 벌였고 밤늦게 까지 장소를 옮겨가면서 장시간 투쟁을 벌인 것은 향후 투쟁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5·3시위에 놀란 군사독재 정권은 집시법이 아니 소요죄로 다수의 시위참가자들을 구속하고 수배령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좌경 용공세력으로 낙인찍어 보수야당과의 결합마저 차단하려고 하였다. 또한 한편으로는 개헌을 매개로 보수야당에 대한 회유와 더불어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해서는 탄압의 강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었다. 군사독재 정권은 ML당 사건, 반제동맹 사건 등 다수의 조직사건을 조작해내면서 민주화운동세력과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어서 이들의 결합을 가로막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급기야는 박종철군 고문살해 사건을 저지르고 이에 대한 은폐공작이 드러나면서 전국민적인 분노는 점차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이에 불안을 느낀 전두환 정권은 4.13호헌 조치를 발표하게 되고 이에 대해 국민들은 6월항쟁으로 응답하게 된다.

언뜻 구속자와 수배자를 양산하였고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군사독재 정권의 선전공세로 인해 민주화운동세력이 심대한 타격을 입은 것 같지만 실상은 더 큰 투쟁을 준비하여 맞이할 수 있는 교훈을 얻고 투쟁의 자신감을 내적으로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울러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날로 커져가고 있었던 국민들에게는 5·3시위로

인해서 민주화운동세력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는 어떠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다.

무릇 역사의 변화는 같은 맥락을 갖는 다양한 사건과 행위들이 복잡하게 얹히며 진행되다가 특정 시점에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면 결국 5.3시위는 군사독재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에 맞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수많은 투쟁의 지류들이 5·3시위라는 강으로 합류하고 마침내는 6월항쟁의 바다에 이르게 되는 승리를 향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큰 변화를 가져온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다.

사상은 폭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

생각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또한 하나의 생각으로 통일시키지 못한 것도 큰 문제는 아니었다. 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상황을 만들고 일정 시간 지켜내면서 비록 다른 구호와 주장을 외쳤지만 폭압적인 정권에 맞서 두려움을 떨치고 함께 깨어진 보도블록과 화염병을 던지면서 서로가 민주화운동의 동지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였던 것이 큰 소득이고, 이는 이후 더욱 폭압적으로 변해가는 군사정권에 맞서 흔들림없이 싸워나갈 수 있었던 자양분이 되었다. 그래서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펼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는 6월항쟁이 확보한 훨씬 확대된 공간과 시간을 관통하면서 한편으로는 ‘호헌철폐 독재타도’라는 보다 정제되고 압축된 구호로 집약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갈래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지금은 반미 구호나 해방구의 주장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5·3시위 당시보다 사상적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직도 미흡하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사상의 자유는 수없이 펼쳐온 투쟁의 결과이며, 이 과정에서 5·3시위에서 뿌려진 유인물과 외쳐진 구호는 이후의 많은 조직사건의 밑거름이 되기는 했지만 사상의 자유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역사의 진리를 되새겨본다면 우리 사회가 보다 공공연하게 사상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5·3민주항쟁이 명시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5·3시위는 당시의 군사독재 정권과 이에 부역한 언론사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폭력성과 좌경용공세력 주장은 민주화운동의 긴 역사적 도정에서 보면 상투적인 수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독재 치하에서 신음하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그저 독재정권 수호와 연장의 수단으로 인식 되었을 뿐이었다. 5·3시위는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전 과정에서 찍힌 무수한 점들 중 하나지만 36년이 지난 지금 민주화운동의 하루 하루가 전쟁같았던 당시의 상황속으로 들어가 보면 5·3시위가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이는 단지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그 역사적 의미를 담아 인천에서는 2018년 개정된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에

민주화운동을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4·19혁명, 5·3민주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로 규정하면서 5·3시위를 5·3민주항쟁으로 명명하여 기념하고 있다.

비록 5·3민주항쟁이 당시에는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 전개되는 일련의 민주화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고 특히 6월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에서 기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5·3민주항쟁’의 이름이 당당히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illegible]

토론

이재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

인천5.3민주항쟁은 국가기념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재성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위원

1 기초 발제문에 대한 토론

기초 발제문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는 독재정권 시기에 만들어진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있다. 우선 1) ‘신민당 개헌추진위 결성대회가 무산된 사건’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확실히 ‘신민당 개헌추진위 결성대회가 무산되었다’는 표현은 인천5.3민주항쟁에서 신민당의 개헌추진위 결성대회와 민통련, 인사연,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 재야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를 분리하는 것이다. 그런 후에 신민당 결성대회가 무산된 것의 책임이 재야 단체에게 있다는 논리를 구축해 가는 독재정권의 악의적인 논리 조작이다. 그 논리를 따라가면 신민당만이 민주화운동 세력이고 재야 단체들은 폭력 좌경 용공 세력일 뿐이다. 결국 1986년 5월3일은 민주화운동이 무산되고 소요죄로 처벌되어 마땅한 ‘5.3사태’가 발생한 날짜로 규정되는 것이다.

사실 신민당은 김영삼과 김대중의 ‘민주협’이 ‘민주제 개헌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한 후 (1985년 12월 초), 그에 이끌려, 즉 ‘견인되어’ 개헌운동에 나선 것이었고, 전두환 정권은 개헌과 관련된 옥내 집회마저 불허하여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신민당 기관지를 압수하고 주요 인사를 가택연금 조치하고, 신민당사와 민주협 사무실을 봉쇄하는 등, 개헌운동과 개헌 논의의 확산을 막으려 했던 당사자로서 신민당의 5.3인천대회 무산의 책임을 민주화운동 진영에게 돌리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논리이다.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신민당 개헌추진위 결성대회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등을 거치면서 거대한 대중운동으로 발전한 데에는 1986년 2월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를 시작으로 KNCC, 고려대, 한신대, 성균관대, 서울대 등 사회 지도층으로 번져나간 ‘시국선언’ 정국이 그 배경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개헌을 위한 시국선언에는 종교계 5개 기관과 약 30여 개 대학의 교수 800여 명이 동참하는 등 신민당과 민통련 등 민주화운동단체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확산되는 과정에 있었다.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개헌추진위 지역지부 결성대회와 현판식은 신민당만의 개헌 서명운동이 아니라 민주협, 민국련, 민통련, 민청련, 그리고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진영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대한 항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 무리한 탄압을 시작한 전두환 정권이야말로 5.3민주항쟁을 ‘사태’로 만든 장본인이며, 신민당 개헌추진위 결성식을 계기로 민주화운동 진영을 분열시키고 재야사회운동 단체를 탄압하는 계기로 삼으려 했던 전두환 정권에게 모든 책임이 돌려지는 것이 타당하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큰 흐름과 1987년 6월 항쟁에서 국민적 열망으로 드러난 구호를 통해서 볼

때, 민주화운동의 본질은 ‘독재 타도’에 있었다. 따라서 1986년 2월부터 신민당이 “직선제 개헌을 위한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과 별도로 신민당 이민우 총재가 전두환 정권과 타협하려는 정치적 행보를 걷는 것에 대해 재야 단체들이 이를 강력 비판하면서,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길로 ‘견인’하고자 했던 것을 침소봉대하여 신민당과 재야 단체를 분리하는 논리는 독재정권의 악의적인 프레임 조작이다. 신민당에서도 대회 무산에 대해 재야 단체를 비판하지 않았고, 독재 정권의 민주화운동 탄압과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에 대회 무산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둘째로 발제문에서 ‘폭력 시위’ 문제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강조되었다. 사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총칼로 정권을 잡고, 유신헌법 체제에서 국가폭력을 자행하며 정권을 유지한 박정희 대통령이나, 1980년 광주에서의 학살을 자행하며 독재 정권을 연장해 나가면서, 수많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하고 죽인 전두환 대통령이 민주화운동 진영에게 ‘비폭력’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 시민사회 일각에서 제기할 수 있는 폭력 시위에 대한 비판이나, 폭력 시위의 정치적 효과 논쟁 등은 해 볼 수 있는 논쟁 주제이다. 그렇지만 인천5.3민주항쟁을 특히 1987년 6월 항쟁과 비교하면서, 폭력시위 양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987년 6월 항쟁 과정은 그렇게 평화적이지만 않았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6월 말까지 이어지는 항쟁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파출소, 검문소, 지서와 경찰차, 전경차가 불에 타고, 여러 지역 민정당사가 공격을 당했으며, KBS방송국까지 타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당시 수사 당국에서는 민정당사 방화, 경찰차량 탈취, 경찰 폭행, 공공시설 파괴 등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전복하려던 과대망상적 난동시위’로 결론 맺었고, 검찰과 법원은 이를 소요죄로 처벌했다. 그렇게 본다면 1987년 6월 항쟁은 인천5.3민주항쟁의 몇 배에 해당하는 규모의 ‘소요’였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즉, 더 이상 인천5.3민주항쟁에 대해서 폭력 시위라는 잘못된 인식이 덧씌워지지 않도록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화운동 진영 내부에서도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의 폭력 시위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서 너무 방어적인 입장에서만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발제문에서 ‘경기도청 점거계획’과 ‘민정당사 방화’ 등에 대해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당시 민민학련 지도부의 한 사람의 증언은 일부 조직이 그러한 계획을 수립, 시행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인천5.3민주항쟁 과정에서 정권과 경찰의 개입과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자체적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셋째로, ‘좌경 용공’ 문제는 우리 사회의 분단 현실, 오래된 반공이데올로기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사회란 무엇인가, 민주헌법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철학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인천5.3민주항쟁 과정에서 일부 단체가 급진적 주장을 하고, 반미 구호를 외치고, 일부 유인물에서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전체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대다수 시민, 학생, 노동자들의 뜻이 ‘좌경 용공’으로 매도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전체 민주화운동을 ‘좌경 용공’으로 몰아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권력 집단의 고전적인 프레임 조작이다.

1969년에 박정희의 ‘3선 개헌’이 이루어지고 1972년에 들어서서 대통령 직선제가 폐지되고 유신헌법이 만들어지자, 1973년부터는 유신헌법 반대, 구체적으로 1973년 12월 24일부터 ‘개헌 청원 1백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된 바가 있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좌경 용공’ 프레임을 가지고 ‘민청학련이 공산주의자의 배후 조종을 받는 폭력 국가 변란 기도 세력이며 그 배후는 인민혁명당’이라고 발표하고, 긴급조치 4호를 발동했으며 1975년 4월 9일에 인혁당 관계자 8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직후 형을 집행해 버렸다. 또한 1975년 ‘개헌청원백만인서명운동본부’의 이름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던 장준하는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에서 의문사를 당했다.

독재 정권의 ‘좌경 용공’ 프레임은 오랜 군사독재 체제, 권위주의 체제에서 정권 유지와 정치적 정당성의 가장 중심이 되어 온 반공이데올로기에 닿아 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유혈 진압과 학살도 결국 극단적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었다. ‘빨갱이는 맞아도 되고 죽어도 된다’는 식의 극단적 반공이념이 반인권, 반민주, 반헌법적 행위를 ‘진정한 애국’으로 미화시켜 독재정권 유지에 복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오랫동안 작동해 왔다. 1986년 인천5.3민주항쟁 직후에도 마찬가지로 국가폭력이 자행되었다. 수많은 조직 사건과 고문, 성고문, 의문사, 구속, 구타 등이 1987년 초까지 이어졌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민주화운동 진영은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나갔다.

인천5.3민주항쟁 기념사업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기반하여 당시 자행되었던 고문, 조작, 통제, 공작, 국가폭력 등의 실상을 역사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고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복권되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2 법률 개정안에 대한 토론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명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0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 들어서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결국 행정안전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2년 행정안전소위 회의록을 보면 법개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첫째, ‘시행령에 유사한 민주화운동이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인천5.3민주항쟁도 시행령에 명기하자는 의견. 둘째, 법령에 명기하는 데에는 국가의 법정기념일로 하고 법에서 근거할 정도의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사건이라는 의견으로 나와 있다. (즉 인천5.3민주항쟁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또한 셋째, 별도의 법률이 있는 경우 명기되지 않은 사례가 있고(광주민주화운동), 넷째, 폭넓게 사례를

명기할 경우에 다른 여러 민주화운동도 다 명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예상되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등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법률 제1483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민주화운동)에 명기된 사건은 각각 다음과 같다.

시기와 관련사건	법률 제14839호 제2조	시행령 제2조	지역	기념시설 기념일
1960년 (4.19혁명)	2·28대구 민주화운동	2·28대구 민주화운동	경북 대구	2·28민주운동기념회관 국가기념일
1960년 (4.19혁명)	3·8대전 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화운동	충남 대전	3.8의거 둔지미공원, 기념탑 국가기념일
1960년 (4.19혁명)	3·15의거	3·15의거	경남 마산	국립3.15민주묘지, 3·15의거발원지기념관 국가기념일
1960년 (4.19혁명)	4·19혁명	4·19혁명		국립4·19민주묘지, 4·19혁명기념관, 기념탑 국가기념일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1979년 (부마항쟁)	부·마항쟁	부·마항쟁	경남 부산, 마산	부마항쟁발원지 표지석, 국가기념일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		광주민주화운동	전남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국가기념일
1987년 (6월항쟁)	6·10항쟁	6·10항쟁		국가기념일

위 자료를 보면, 1960년 4.19혁명 관련된 국가기념일이 4개인 반면에 1987년 6월항쟁과 관련된 국가기념일은 단 1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에 각각 지역과 연관된 국가기념일이 지정된 반면, 경기·인천권에서는 한 개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법률 제1483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민주화운동)에 명기된 사건들에 대해 정확한 기준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경기·인천권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리고 1987년 6.10항쟁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1986년 인천5.3민주항쟁이 법률로 인정을 받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현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의 개정을 통해서 법률로 정하여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하는 민주화운동을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1) 지역 민주화운동사에 대한 법제도적 균형을 이루고, 2) 그동안 정권의 잘못된 평가로 인해 간과되었던 5.3항쟁에 대한 역사적 복권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인천5.3민주항쟁은 비단 인천지역만의 투쟁이 아니었고, 또한 5월 3일 하루만의 투쟁도 아니었다. 인천5.3민주항쟁은 길게는 1973년 이후 시도된 개헌투쟁의 부활이었다. 정당과 사회단체가 모이고, 종교계와 학계가 지지하여 전 국민적 열망으로 전두환 독재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개헌투쟁의 정점이었다.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청주 등 도시와 서울을 잇는 과정에 있던 투쟁이었고, 1980년 광주와 1987년 서울을 잇는 과정에 있는 투쟁이었다. 민주헌법과 민중생존권을 직선제 개헌과 연결하는 투쟁이자, 6월 항쟁 이후 이어진 노동자대투쟁의 정신을 앞서 발산했던 투쟁이었다. 1987년 6.10항쟁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독립적인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자격이 충분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상 민주화운동의 정의

김민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상 민주화운동의 정의

김민재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정책관

‘인천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관련하여 이우재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님의 발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인천5.3민주항쟁 당시민주화운동의 분위기와 5.3항쟁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이해 할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천5.3민주항쟁이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시위로, 1년 뒤 발생한 1987년 6월 항쟁의 시발점이라는 평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인천5.3민주항쟁을 재조명해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규정하는 민주화운동에 인천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상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에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는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시킨 활동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해, 법에서는 민주화운동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 제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10개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민주화보상법』 상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주화운동으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발행한 민주화운동백서에서는, 인천5.3민주항쟁을 ‘5월 3일 인천에서 다수의 시민, 학생, 노동자들이 모여 민족·민주·민중헌법쟁취, 직선제개헌, 노동자해방 등의 구호를 외친 시위로 수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항쟁’으로 설명하고, 85건의 신청 중 73건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결정하였습니다. 즉,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라 인천5.3민주항쟁은

이미 법에서 정의한 민주화운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5.3민주항쟁을 법령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다른 민주화운동과 항쟁 참여 규모와 민주화운동 역사에 미친 영향 등 고려해 볼 때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6.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등도 법이 아닌 시행령에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보면 법 제2조에 나열된 민주화운동은 예시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민주화운동을 정의하고 있는 것은 시행령 제2조입니다. 때문에 인천5.3민주항쟁도 시행령 제2조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 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 역사에서 개별사건에 대한 논의와 평가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blank, lined paper. It features approximately 20 evenly spaced horizontal grey lines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or typing. The background is a clean, solid white color.